

환경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회교육적 접근

신 현 덕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I. 서 론

우리 나라의 환경전문가 양성교육은 10여년이 경과한 오늘날 까지도 지나치게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해결방법만을 다루고 있는 환경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에만 일방적으로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편협한 교육을 받은 환경전문가들은 환경문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이익집단들의 입장⁽¹⁾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편협한 지식이나 주장만이 환경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아집에 가까운 태도를 다분히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환경 전문교육 과정에 환경법, 환경정책, 환경행정, 환경경제학,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환경행정관련 교과목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단가 또는 부분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강의의 담당할 교수의 부족 때문에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고 볼 수도 있다.

환경문제는 과학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보다 복잡한 사회경제적인 내용을 갖는 어려운 문제이며, 자연과학은 물론 사회과학적인 해결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²⁾. 공기오염의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주요 공기 오염물질⁽³⁾에는 미립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일차오염물질과 이러한 오염물질들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광화학적인 화

합물이나 산성비와 같은 이차오염물질 등이 있다. 이러한 물질은 공장굴뚝이나 난방시설을 위한 고정배출원이나 차량 등의 이동배출원에서 나온다. 공기오염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공기오염물질이 어디에서 배출되며, 그 종류와 성질은 어떠한 것이냐 등에 관한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이러한 물질에 관한 과학적인 탐구는 화학 및 물리학 등 자연과학의 분야에 속한다. 이러한 물질이 위에 든 고정 또는 이동배출원에서 나오는 것을 사전에 기술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기계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 등의 분야에서 발전된 방지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기오염문제의 해결은 과학기술적인 접근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배출원에서 나오는 공기오염물질을 제도적인 접근⁽⁴⁾에 의하여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공기오염물질은 정상적인 산업활동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면 그 양도 훨씬 더 많으며, 배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보다 소위 불특정 다수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므로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배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공기오염의 파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 등은 법이나 행정의 영역이라 하겠으며, 오염자에게 오염발생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공동처리시설의 건설을 지원하고, 오염방지업소를 육성하는 것 등은 경제적

(1) 환경관련 이익집단은 주민과 환경단체와 같은 공공이익집단과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산업과 같은 사적이익집단으로 양대별해 볼 수 있다. 환경론자들은 자신의 주장이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등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에 의해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보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안이한 태도라 할 수 있다. Clarence and Barbara Davies, 1975, *The Politics of Pollution*, 2d ed., Indianapolis : Paegaus, chap. 4 ; and Walter Rosenbaum, 1977, *The Politics of Environmental Concern*, 2d ed., New York : Praeger, chap.5 참조.

(2) 신현덕, 1989, 「환경문제연구」, 동화기술, p.184.

(3) Laurent Hodges, 1977, *Environmental Pollution*, 2d ed.,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chaps.3,6 참조.

(4) 환경문제의 해결을 환경과 관련이 있는 법제도, 경제제도, 행정 및 정치제도 등에 의한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제도적인 접근(institutional approaches)은 본 논문이 다루는 환경행정의 주요연구분야가 된다. 신현덕, 1989, 앞의 책, pp.258~272 참조.

인 유도책의 대표적인 실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기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기술적으로는 실현 가능한 방지시설이라 할지라도 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설치 및 운영비용과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일이라 하겠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과학기술적인 접근에 있어서 보다는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제도적 접근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더 가중되어 역설적이긴 하지만 문제해결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환경정책기본법이 채택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들⁽⁵⁾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사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의 하나이지만, 그 효과적인 실시가 대부분의 경우에 관련 이익집단의 이익충돌의 노골적인 표출로 인하여 제도 자체의 존재의의가 이미 상실하거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환경론자, 환경처 및 관련 주민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려고 고심하고 있지만⁽⁶⁾, 경제부처나 개발론자들은 환경보호는 경제발전이나 개발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 경우에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의 수립과 그 실시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것을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경험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한 모델 등의 위락시설이나 연료저장시설의 건조, 삼림이나 농지를 훼손하면서 급조되고 있는 골프장의 건설, 서울 주변지역의 신도시건설 등은 여러 가지 상반되는 이익이 혼재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로서 환경론자의 주장이 올바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한 문제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NIMBY(Not In My Back Yard)⁽⁷⁾ 심리의 만연으로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지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유치하기를 꺼리는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하여 쓰레기 매립장(폐기물 포함), 화장터, 묘지 등으로 할당될 여분의

땅은 더 이상 어디에서나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는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환경법, 환경정책, 환경행정, 환경경제학,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행정관련 사회제과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러한 과목들을 현재의 환경전문교육의 교과과정에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환경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교과과정의 설정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II. 환경전공학과의 현황

2-1 학부의 환경전공학과

우리 나라의 학부 수준의 환경공학과 및 환경학과의 현황(1990년 3월 현재)을 살펴보면, 자연과학분야가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등 총 9개 학과; 공학분야가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등 총 22개 학과; 기타분야가 제주대학교 해양환경학과 등 총 10개 학과로 전국대학의 환경관련학과의 수는 41개 학과에 이르고 있다⁽⁸⁾. 이러한 학과들의 경우 학과의 특성상 환경행정과 관련된 사회계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과의 수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경희대학교 환경학과의 「환경법」, 「환경관리론」, 「환경영향평가」⁽⁹⁾;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법규」, 「환경영향평가」⁽¹⁰⁾;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경제학」, 「환경법규」⁽¹¹⁾;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영향평가」⁽¹²⁾;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법규」, 「환경영향평가」⁽¹³⁾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부의 사회계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 나라보다 환경교육의 학제적인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접근을 과학기술적인 국면에만 지나치게 치중하여 전공과목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고집하려 하지 않는데 학제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 환경」, 「환

(5) 동법 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등),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사후관리).

(6) 예를 들면 현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갖고 있는 절차법으로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다 강화된 규제법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화가 최근에 환경처에 의하여 추진 중에 있다.

(7) 나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거부반응을 보이는 집단이기주의. R.J. Johnston, 1989, *Environmental Problems: Nature, Economy and State*, London: Belhaven, p.172.

(8) 전국환경관련학과 <통계>

(9) 경희대학교 요람, 1991, pp. 234~236.

(10) 서울시립대학교 요람, '90~'91학년도, pp. 218, 221~222.

(11) 건국대학교 요람, 1988~1989, pp. 121~122.

(12) 충북대학교 요람, 1989~1990, pp. 162, 164.

(13) 인하대학교 대학안내, 1990, p. 121.

경학 세미나, 「환경윤리」, 「환경법원리」, 「제3세계의 환경 전망」, 「환경영향평가」, 「환경계획원리」, 「환경경제학」, 「지역환경문제」, 「미래환경의 관리」 등 다양한 사회계 과목을 개설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 국면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¹⁴⁾. 그런데 환경전문교육의 주류는 대학의 학부 수준에서 깊이 있게 주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대학원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학부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대학교의 교과과정의 체계를 우리 나라에서도 채택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이 학부수준에서 기술 전문인의 양성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¹⁵⁾.

우리 나라의 경우 환경문제를 이미 과학기술적인 문제로만 인식하여 문제해결을 그 분야의 가급적 많은 그 분야의 과목만을 가르치려는 경향을 대부분의 환경전공학과들이 추구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환경행정관련 사회계 과목이 극히 예외적으로 개설되어 있다 할지라도 효과적인 강의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등의 사회계 학과의 경우 그 교육목표의 기본방향이 환경지향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환경법, 환경행정, 환경경제학 등의 과목의 개설 가능성은 이공계의 환경전공학과와 경우보다 훨씬 더 희박하며⁽¹⁶⁾, 설사 그러한 과목이 한두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관심 부족으로 성공적인 강의 진행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환경행정관련 사회계 과목의 중요성은 인정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목들이 임지해야 할 학과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개설의 가능성과 효과적인 강의의 진행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학부 수준에서 기대한다는 것이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2 환경관련 대학원

우리 나라의 환경관련 대학원으로서 「환경」이라는 용

어를 명시하고 있는 대학원으로는 서울대학교의 환경대학원, 홍익대학교의 환경대학원, 영남대학교의 환경대학원, 한양대학교의 환경과학대학원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의 환경대학원은 1973년 「도시와 지역의 공간계획과 생활환경의 합리적 구성에 관한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그 응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환경계획학과와 환경조경학과로 양분되며 환경계획학과에는 1981년 11월에 박사과정이 설치되었고, 환경조경학과에는 1989년 11월 부터 농대 조경학과와 협동으로 조경학 박사과정이 설치되었다. 환경계획학과의 교육목표는 「국토공간과 그 부분 체계로서의 도시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인간정주공간에 대한 계획 및 생활환경의 개선문제를 관련학문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과학적으로 연구하며, 실질적 학문으로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을 습득케 함」에 있으며, 「환경계획학전공」과 「환경관리학전공」으로 전공으로 분야가 구분되어 있다⁽¹⁷⁾. 그런데 환경계획학이 도시 및 지역계획을 의미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환경관리학이 환경법, 환경정책, 환경행정, 환경경제학 등에 의한 사회과학적인 관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환경공학에 의한 과학기술적인 관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홍익대학교의 환경대학원은 「학술의 이론과 과학적 방법을 연구하여 생활환경에 관한 고급 전문가를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학원에는 환경설계학과만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공분야로는 「건축설계」, 「도시설계」, 「조경설계」, 및 「실내장식설계」 등이 있다⁽¹⁸⁾.

영남대학교의 환경대학원은 「환경학 전반에 관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며, 환경관리자 및 환경문제 전문가로서 독자적 능력을 함양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대학원에는 「환경계획학과」, 「환경과학과」, 「환경공학과」, 「환경설계학과」, 「환경보건학과」 등이 설치되어 있다⁽¹⁹⁾.

(14) USCB Catalog, 1981, pp. 242~244.

(15) 환경관련 학문을 학부에서 지나치게 전문화하여 교육하는 경우, 예를 들면 대기전공자는 수질이나 소음 등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인식할 수조차 없는 편협한 지식을 갖는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어 환경문제를 학제적 접근에 의하여 해결하는데 있어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공기, 물, 토지 등의 환경매체를 별개의 독립된 매체가 아니라 상호관련이 있는 전체적인 매체로 파악해야 한다는 cross-media approach의 경향이 선진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더 바람직하지 않은 교육방법이라 하겠다.

(16) 일부의 사회계학과에서 환경행정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예컨대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와 「환경행정」, 법학과의 「환경법」; 경희대학교 법학과의 「환경법」; 충북대학교 법학과의 「환경법」 등이 극히 예외적으로 개설되어 있는데 불과하다. 각 관련대학교 요람 참조.

(17) 서울대학교 요람, 1990-91, p. 124.

(18) 홍익대학교 요람, 1986-1987, pp. 218, 224~226.

(19) 영남대학교 요람, 1990~1991, p. 311.

한양대학교의 환경과학대학원은 「인간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계획 및 환경공학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교수, 연구하며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종합능력, 분석력, 창의력, 판단의 성숙성……을 바탕으로 한 지도적 인격과 능력을 고루 갖춘 유능한 인재를 배양하여 인간환경의 발전에 기여함」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환경계획학과와 환경공학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환경계획학과와 전공분야로는 「지역계획」, 「도시개발」, 「도시시설」, 「조경건설」등이며, 환경공학과의 전공분야로는 「수질오염」, 「해양오염」,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이 구분되어 있다.⁽²⁰⁾

비록 위에서 살펴본 대학원의 경우처럼 「환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자원관리전공」, 산업대학원의 「환경공해전공」, 「도시계획전공」, 보진대학원의 「환경관리전공」⁽²¹⁾; 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의 「환경공학과」⁽²²⁾; 인하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의 「환경공학과」⁽²³⁾;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의 「환경공학과」⁽²⁴⁾ 등이 그 분류가 학과이든 전공이든 간에 주로 과학기술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대학원 수준의 환경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 거의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특수대학원 이외에도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학부의 환경공학 또는 환경학과와 동일계열의 학과가 개설되어 환경분야에 고급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그 배출인원의 수가 특수대학원의 경우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이 적으며 또한 교육목표도 실무보다는 학자의 양성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의 환경전문인력의 범위에는 편의상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III. 환경행정전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부의 환경전공학과와 경우는 물론이며, 환경관련대학원의 경우에도 교육목표가 학과의 명칭이나 전공분야의 구분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이라는 명칭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도시계획, 조경,

건축설계, 환경공학 등의 분야에 치중하고 있으며, 환경행정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원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환경행정전공」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교육목표는 「행정의 이론과 실재를 과학적 방법으로 교수하고 연구하며 지도자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갖춘 유능한 행정인을 양성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10여년전부터 졸업생을 배출해온 「환경행정전공」은 환경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을 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주요과목을 보면 「환경법」, 「환경정책」, 「환경행정」, 「환경경제학」, 「환경영향평가론」, 「환경론」, 「환경지리」 등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과목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환경공학」, 「환경모니터링」, 「생태학」, 「토지공법」 등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²⁵⁾

환경행정은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학문분야로 정의할 수 있는데⁽²⁶⁾, 다른 행정분야와 비교해 볼 때 이익집단의 이익충돌, 특히 환경보호와 경제발전 간의 이익충돌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미래지향적인 환경보호정책의 수립과 그 원활한 집행이 경제정책과의 관계에서 제동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행정」, 「환경법」, 「환경정책」, 「환경경제학」 등의 학문분야가 다루고 있는 목표와 그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행정」을 광의로 정의할 때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련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환경정책」, 「환경법」, 및 「환경경제학」 등 관련학문 간의 상관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의 수립은 「환경정책」의 영역이며 환경정책의 수립에는 환경지향적인 정책에 대한 제동을 걸게 되는 경제정책의 기본성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요한다. 더 나아가서 환경정책과 양립하기 어려운 경제정책을 비롯한 기타의

(20) 한양대학교 대학원안내, 1988-89, p. 429.

(21) 연세대학교 요람, 1990-1991, pp. 526, 535-536, 537, 541.

(22) 아주대학교 요람, 1986-1987, pp. 327-328.

(23) 인하대학교 대학안내, 1990, p129.

(24) 건국대학교 요람, 1988-1989, p. 239.

(25) 경희대학교 요람, 1991, pp. 355, 364.

(26) 협의의 행정은 이미 수립된 정책이나 법규의 집행이라 할 수 있지만, 광의의 행정은 정책수립의 단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때, 「환경행정」의 개념 또한 환경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환경행정의 체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Jack G.Beale, 1980, *The Manager and the Environment: General Theory and Practic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Oxford: Pergamon, chap.9 참조.

이익충동에 관한 문제를 심도있게 고찰해야 할 것이다⁽²⁷⁾. 그런데 환경정책의 수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 분야로는 「환경경제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환경경제학은 최소한 환경자원의 이용, 관리, 보전과 관련하여 어떻게 경제이론을 무리없이 적용하여 환경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경제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없는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환경정책의 수립은 불가능할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협의로 정의된 「환경행정」과 「환경법」은 환경정책의 집행과 관련된 학문분야로 할 수 있다. 환경행정은 행정조직을 통하여 수립된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기하려는 데 있으며, 환경법은 규제를 통한 강제력에 의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그 기본방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정책의 행정적 내지 법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환경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제기된 이익충돌의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환경행정을 전담하는 환경처와 같은 정부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경제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정책집행과정에서의 견해 차이로 인한 크고 작은 충돌 때문에 환경정책의 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행정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의 법적 집행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는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능성이 없는 것을 물리적인 강제력에 의해서만 달성하려는 것은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²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정책」, 「환경경제학」, 「환경행정」, 「환경법」 등은 환경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과 관련하여 밀접한 상호보완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환경행정전문가의 양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목들⁽²⁹⁾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학문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 수준의 교육기관의 취약성 때문에 환경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능한 환경행정전문가의 양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환경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회교육적 접근을 환경

전문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등한히 다룬 분야이지만 그 중요성은 우리가 앞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이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그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보다 좀더 절실하게 실감하게 됨에 따라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환경행정전문가 양성을 학부 수준보다는 좀더 분화된 전문교육을 지향하는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달성하는 것이 훨씬 용이한 일이라 할 것이다.

환경행정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환경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했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학부의 전공이 비록 환경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학원 과정에서 「환경행정」과 관련이 있는 교과목들을 체계적으로 엄선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환경전문교육은 1980년도를 전후하여 4년제의 환경전공학과가 설치되면서 전문인력양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모든 관련분야를 통합하여 학제적 내지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교과과정의 주요내용이 과학기술분야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나라의 환경문제를 걸머지고 나아갈 지도급인 사를 양성함에 있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산적되어 있으며 교육목표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하고 있다.

대부분의 환경전공학과가 자연과학분야 또는 과학기술 위주의 교육을 행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환경전문인력은 좁은 자연과학적인 지식만 가진 과학자보다는 환경문제를 기술적인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사회문제의 하나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환경문제의 행정적인 접근은 대단히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적인 접근과 비교할 때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의 이론적인 체계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환경행정관련 과목 중에 「환경법」을 비롯하여 「환경경제학」, 「환경행정」,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과목을 자연계의 환경전공학과에 개설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27) 환경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이익집단의 협조없이 환경행정의 효과적인 목표 달성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불가결한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8) 그 이유는 환경문제의 해결과 같이 복잡성을 띠고 있으며 고도의 과학기술적인 지식과 방법을 요하는 분야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만족한 해결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9) 환경행정과 관련이 있는 core courses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위에 든 과목들은 절차(a process)로서의 환경 행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목들이라 할 수 있다.

는 하지만, 장래의 우리 나라의 환경분야에 종사할 전문인력이 단순히 과학자나 기술자로서만 머물지 않고 환경분야의 공무원, 교사, 교수 또는 정책결

정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신현덕, 1983, “환경에 관한 전문교육”, 「환경교육에 관한 심포지움」, pp. 111~142.
- (2) ____, 1984, “환경문제의 제도적 접근방법”, 「환경법연구」, 제6권, pp. 5~30.
- (3)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1974, Environmental Education at post Secondary Level, 2 vols., Paris : OECD.

- (4)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ocial Study Approach to Education for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Specialists

Hyun-duk Shin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and Information Sciences Kyung Hee University)

Environmental professional education in Korea has been mostly concentrated o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pproaches to environmental problems. Many undergraduate majors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or sciences are designed to produce more technical manpowers in environmental fields. Most graduate schools on the environment also place an emphasis on teaching the technical aspects of environmental problems.

Som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related courses, such as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environmental policy, environmental economic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tc. are partially reflected in some curricula of very limited graduate or undergraduate environment majors. However, teaching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related courses in science or engineering major institutions has not been successfully carried out so far because lack of interests in such courses by most students and the shortage of competent teachers as well. Furthermore, those courses are not widely accepted by the departments of law, political science, public administration, etc. because their major interests are not in the environment-oriented.

Environmental problems cannot be solved by the technical approach along. They should be systematically dealt with through interdisciplinary or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including natural and social sciences covering all relevant disciplines. In this respect, undergraduate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preferably cover broader courses on the environment, and the education for environmental professionals, including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specialists, is preferably handled by graduate schools offering many specialty area courses.

Education for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specialist at graduate level is urgently needed in order to supply the competent manpowers at government, business, and private organization levels dealing with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related problems. This is a new challenging area and the education for such specialists will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near future than technical manpowers which we are now concentrating on their education.